

금호타이어 화재 한달, 주민 피해 막막... 지역 경기 ‘먹구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오는 17일 발생 한 달을 맞는다.

주요 공정 시설이 모두 타면서 생산 중단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유독성 가스 발생 등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2차 피해 호소도 빚발쳤다. 설비 재건·이전에 대한 뚜렷한 안이 없어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우려도 여전하다. 공장 잔해물 해체와 병행해야 하는 합동 감식은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책임 규명 수사 역시 상당 기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76시간 사투’ 공장 화재에 3명 부상·주민 대피

15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 원자재 제련동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20대 노동자 1명이 대피 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어 하반신이 마비됐다. 전화 과정에서 소방관 2명도 다쳤다.

불길에 쏜고후 20t과 샌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 건물 여러 개를 집어삼키며 하루 종일 타면서 2차 피해도 잇따랐다. 쏜고후 연소에 따른 분진이 인접 지역으로 날렸고 광주 전역에 매캐한 연기 냄새가 퍼지기도 했다.

특히 인접한 선운지구와 송정역, 아파트 단지로 퍼지면서 한 때 도로 통행까지 통제됐다. 분진 피해에 따라 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 주민 수백 명이 잠을 청하며 불편을 겪었다.

국가소방 동원령까지 내려지며 헬기·고성능화확차·무인파괴방수차 등 각종 진화 장비가 총 투입됐으나, 붕괴된 잔해 더미 곳곳에서 되살아난 불씨 탓에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불길은 76시간 만에 꺼졌지만 원자재 정련 공정이 모여있는 2공장 부지(15만㎡)중 3분의2 가량이 타거나 그을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피해가 워낙 크다보니 한 달째 공장 조업은 전면 중단됐고 재가동 전망도 불투명하다.

소방 당국은 최초 신고 내용을 토대로 원자재인 고무를 녹이는 산성용 오븐 안에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건강 피해 속출...고용 불안에 하청사도 위기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공장 화재 이후 광주 지역 대기 중 미세먼지에서 중금속인 납, 발암 1군 물질인 니켈이 1년 평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검은 연기가 인근의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지난달 17일 오후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뉴스1

공장 났던 화마... 대피 노동자 1명 중상·소방관 2명 부상
 주민 대거 대피, ‘76시간만 사투’ 원자재 공정 3분의2 타
 발열·두통 호소, 1만2900여 명 2만여 건 주민 피해 집계
 고용불안에 하청사도 위기... 원인·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치보다 수 배 이상 높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민들은 화재 이후 발열, 두통, 목 따가움,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했다. 잣가루가 차량과 상점에 떨어지면서 물적 피해도 잇따랐다. 공장 인근 골목 상점가는 화재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화재 발생 직후부터 이달 11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인적·물적 피해는 총 1만2902명, 2만24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 보상 절차가 막 시작됐지만 언제쯤 얼마나 보상이 가능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환경단체는 “당시 연소된 화학 물질 종류와 양을 공개하고, 화재와 주민 건강 피해 연관성을 규명할 역학 조사가 필요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연간 1조원 안팎 매출을 기록하는 광주 공장이 멈춰서면서 소속 노동자 2500여 명도 고용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가동 중단 기간 동안 기본급의 70% 수준 수당을

받고는 있지만 공장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해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

설비 소실과 노후화 등을 들어 아예 공장을 이미 부지를 매입한 광주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용도 변경 절차부터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 대주주인 중국 기업의 의지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협력업체도 매출 급감과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5월부터 대금 지급이 안 되면 곧 하청업체에 위기가 닥칠 것이다. 직원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관한 자치단체는 이달 안으로 정부에 고용 위기 지역 선포를 건의한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광주공장 노동자 한 명당 하루 7만원 상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 잔해 해체·감식 병행...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화재 직후 경찰은 전담 수사 조직을 꾸

려 원인·과실 규명을 나섰다. 불이 꺼진 직후 경찰과 소방·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기초 현장 조사는 마쳤다. 다만 시설물 붕괴 위험 등 현장 접근이 여의치 않아 본격적인 합동 감식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 현장 통행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잔해 해체가 우선이다. 금호타이어가 이달 말 관할 광산구에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해체 공정이 시작되면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정련 설비는 최대한 보존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과학수사계 감식요원 1명이 참관하며 물증을 곧바로 촬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체 계획서 제출과 심의·의결 등 절차를 고려하면 빨라야 7월 중에는 제대로 된 합동 감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경위를 밝혀내고 과실 여부, 책임 소재를 가려낸다. 법리 검토를 거쳐 형사 처벌도 검토한다.

현재까지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 진술을 확보하고 기계 설비·소방 시설 등의 안전 관리 실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노동 당국도 노동자 1명이 크게 다친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도시가스 요금 용역결과 ‘인상’... 광주시 고심 공급업체 “7년동안 동결돼 신규투자 안돼” 광주시 “인상 결정하면 서민경제 직격탄”

광주시가 7년째 동결인 도시가스 적정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이 ‘인상’으로 결론 지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인상’ 할 경우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받을 수 있으며 ‘동결’ 할 경우 1만세대에 이르는 미공급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신규투자가 안될 수 있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양에너지가 광주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 적정요금을 책정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선정 검증 용역’ 결과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가스는 해양에너지가 공급하고 있으며 요금은 광주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용역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동결’ 또는 ‘인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을 지난 2017년 1.7% 올린 이후 7년 만에 인상하기 위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논의를 통해 최종 인상이 결정된다. 동결일 경우 현행 요금체계가 유지된다.

현재 광주지역 도시가스는 도심을 중심으로 67만8000여세대에 공급되고 있다. 요금은 1㎡당 83.8원으로 각

가정에서 1년 평균 490㎡, 48만228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 134.4원, 대전 117.3원, 대구 110.4원, 부산 97.8원, 서울 86.2원 보다 저렴하다. 공급업체인 해양에너지는 물가 상승과 신규 시설 투자 부담, 관로 정비 등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인상을 할 경우 서민경제가 직접 타격을 받고 위축될 수 있어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동결을 할 경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신규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광주지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214개마을을 1만3900세대이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관로를 설치해야 하며 52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수년동안 동결돼 공급업체가 신규 투자 등을 할 수 없고 질 좋은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도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며 “만약 인상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용역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요금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정부 “대형 화재 금타 광주공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불가”

행정안전부가 대형 화재가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관련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결정을 내렸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선포 불가 결정 의사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성격, 피해 규모, 과거 선포 사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긴급한 수습·지원이 필요한 재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포 불가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가 행·재정 능력으로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화재 피해 수습과 시설 복구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광산구는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재 발생지인 금호타이어 측에 주민 피해 보상을 적극 요구한다.

또 피해 수습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 구상권 청구도 검토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는 고용위기지역 선포를 위한 자료를 준비해 이달 중 정부에 검토를 건의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동자 한 명당 하루 7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원된다.

/뉴스1

구례군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

구례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 지역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

기부혜택

혜택 1 세액공제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 2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이내
 -구례사랑상품권
 -구례특산물(흑돼지, 한우, 천연벌꿀 등)

기부방법

온라인
 은행·이플도 가능해요

국민 신한

i-ONE Bank 하나

기업 하나

QR코드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부터 답례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자동 세액공제까지

오프라인
 전국NH농협 방문

고향사랑e음 접속 및 가입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지역선택 : 전라남도 구례군)

답례품 주문하기

전국NH농협 방문 → 기부금 납부 → 답례품 주문하기

문의 구례군 총무과 061-780-2307